

- 노동 없는 민주주의에서 노동존중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치의 가능성을 모색한 '6411 정신(노회찬 정신)'과 노동 없는 민주주의 해결을 위한 진보정당과 조직노동운동세력의 역할, 그 중에서도 조직노동운동세력의 과제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 한국의 노동자세력은 민주주의 이행기라 할 수 있는 87년 노동자대투쟁 시기를 거치면서 과거 어용노조 체제를 거부하고 민주노조운동을 전개하며 성장(95년 출범 당시 48만 명에서 2023년 120만 명)한 노동조합으로 강력한 사회정치 세력으로 부상했다. 특히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조운동세력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통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여러 차례의 정치적 부침을 통해 진보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가 철회되었고, 다수의 진보정당들로 분열(분화)된 정파구도 및 지형에서 어정쩡한 위치에 놓여있다.

-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조직노동운동세력은 소외된 노동의 보호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노동귀족집단, 집단이기주의 세력 등의 비판을 받으며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다. 정치적으로는 정파운동세력의 하위 파트너로 간주(또는 전략)되었고 불과 20년 만에 한국의 노동운동은 의미 있는 사회정치세력으로 성장하는데 실패했다. 이러한 상태로는 노동 없는 민주주의를 극복하고, 노동존중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치의 중요한 역할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 진보정당의 처지 또한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표하려고 존재하고 있지만 성장은 멈춰있고, 군소정당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사멸 위기에 처해있다. 한국의 진보정당이 노동존중의 정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조직노동운동세력과 정파운동세력을 대체하는 새로운 주체형성의 노선이 시급하다는 것에 대체로 동의한다. 하지만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를 형성하고, 소외된 노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민주주의 강화를 통한 노동조합운동 강화 전략은 진보정당 운동의 발전과 성장에 여전히 중요한 요소라 생각한다.

- 윤석열 정권 등장 이후 지난 2년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모든 영역에서 심각하게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지행되고 있는 조직노동운동세력에 대한 공격으로 노동계급의 위기는 심화되고 있다. 나아가 민주주의 위기가 노동계급의 위기를 어떻게 확대, 강화시키고 있는 것인지를 보고 있다. 특히 조직노동운동세력에 대한 현 정권의 태도는 여러 정치적 변수에 따라 속도와 강도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정치적 이용물로 사용되는 것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 민주노총을 비롯한 조직노동운동세력이 '6411 정신'이 호명하고 있는 계급 이하의 존재들과 소외된 노동의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노동귀족집단, 집단이기주의 세력 등으로 낙인찍히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운동 강화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

- 첫째, 민주주의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동계급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외된 노동, 미조직 노동자, 비공식 부문에 대한 대표성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노동조합운동의 확장, 그리고 노동조합운동의 민주주의 강화와 공고화로 나아가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반노조' 기조의 노동개혁은 노사관계에서의 노동조합 영향력 약화, 산업구조 변화에서 비공식 부문과 불안정 노동자 증가 등으로 노동조합 대표성의 위기를 점점 확대시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노동계급 대표성의 약화는 계급 내부의 분열과 권리의 축소를 동반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조합)운동을 할 수 없게 만든다. 이를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고용된 노동자와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만이 아니라 노동계급 전체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 둘째,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운동을 공고히 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노동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최우선으로 조직노동운동세력에 대한 탄압과 순치, 노동자 권리 박탈을 위한 노동정책을 자행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배제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며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있다. 사회 정의를 요구하는 집회나 시위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억압하고 있다. 이렇듯 민주주의가 약해질수록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공격과 통제는 더욱 커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위기는 노동계급의 위기이며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운동의 약화로 귀결된다. 따라서 여성, 청년, 성소수자, 장애인, 불평등, 돌봄, 공공성, 직장 내 민주주의, 성차별, 노동안전과 건강 등 사업장 범위를 넘어선 문제를 노동조합 내부로 들여 놓아야 하고, 그 내용이 노동운동의 주요한 문제로 제기되어야 하며 이것이 노동조합운동 강화와 민주주의 강화로 귀결되어야 한다.

- 셋째, 정치운동(노동자정치세력화)을 포함한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 작업이 필요하다. 그 연장선에서 사회적 힘과 정치적 힘을 결합하기 위한 노동(조합)운동 강화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것은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사회적 힘을 성장·강화하고 정치적 힘과의 결합으로 구조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권 등장은 아이러니 하게도 노동(조합)운동의 위기를 새로운 노동(조합)운동의 전환을 만들 기회이기도 하다. 민주당 정권 시기와 진보정당의 의회주의 정치에서 겪었던 오류에 다시 빠지지 않고 구조 개혁을 이루려면, 관건은 노동계급 대표성과 노동(조합)운동 강화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 세력 강화이다.

- 따라서 비공식 부문에서의 노동자 대표성 강화, 지역사회에서의 노동(조합)운동의 확장, 노동(조합)운동의 민주주의 강화와 공고화, 노동(조합)운동의 혁신을 통한 노동조합의 재활성화 등 사회 세력으로서 노동(조합)운동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운동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위기 원인을 진단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운동의 전환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구조적 조건은 쉽지 않다. 조직노동운동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과 탄압, 정치 세력으로서의 진보정당이 소수라는 구조적 조건 등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다. 하지만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하고 획득하기 위해 투쟁해야 하고, 진보정당의 의회주의 정치에서 겪었던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 위에서 언급했듯이 노동자의 노동계급 형성과 노동조합운동 강화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 세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난 시기와 다른, 앞으로의 조직운동세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이다.

- 새로운 사회를 향한 비행에서 노동운동과 진보정당 운동은 어느 한쪽의 힘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노동존중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치의 가능성에 주목한 것이 ‘6411 정신’이라면, 민주주의의 본질로서 노동존중을 구현하고 노동존중 사회가 정치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재생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진보정당의 정치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진보정당이 노동존중의 정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조직노동운동세력과 정파운동세력을 대체하는 새로운 주체형성의 노선이 시급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오래된 것은 죽어가고 있으나, 새로운 것은 태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 또한 동의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구 인사와 춘천시의회 2월 회기 준비를 위해 분주한 어느 날 노회찬 재단에서 매달 정기 세미나를 시작하고 첫 번째 순서에 토론자로 참석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일정이 가능해 참석한다고 전달하고 세미나 날짜가 다가오자 부랴부랴 재단에서 보내온 자료를 확인던 중 마치 나에게 하는 질문인 것 같은 부분이 있었다.

결국 노회찬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계승자들 역시 자신들의 6411번 버스를 찾아 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진보정당의 구체적인 정책과 행동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내는 전략적 실천이 시도되어야 한다.

즉 6411정신이 그저 고상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정치경쟁력 강화의 전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제대로 수행되어 일정한 성과를 이룬다면, 진보정당만의 성장이 아닌 양대 주요 정당들의 혁신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지난 2022년 지방 선거에서 나는 노회찬 의원님과 관련된 약력을 첫 번째로 내세웠다. 작은 선거에서 후보가 내세우는 첫 번째 약력은 유권자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다. 선거 기간 중에는 약력을 보고 노회찬을 이야기 하고 그리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때마다 노회찬 정신을 이어 가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내가 계승자까지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주민들과 노회찬 정신에 대해 공감하고 약속한 것을 지금 잘 지키고 있는지? 당선 후 기초의회 의원으로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하면서 내가 찾은 6411번 버스는 있는지? 구체적이지 않아도 정책과 행동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길게는 노회찬 의원님께서 돌아가신 후부터 짧게는 정의당 소속 지방의원이 된 후부터 돌아보게 되었다.

아직 6411번 버스를 찾지도 행동프로그램을 만들지도 못했고 그 길이 점점 멀어져 가는게 솔직한 심정이다. 또한 총선을 앞둔 현재 진보정당은 가장 큰 시련에 놓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노회찬의 6411 연설 후 각 지역과 현장에서 헌신적인 활동도 있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수 많은 6411번 버스를 찾아 나서는데 부족하였고 뱃지를 향한 권력투쟁과 국회 안에서의 정치활동에만 과도하게 집중 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나 또한 지역에서 6411번 버스를 찾기 위한 노력도 노회찬 정신을 이어 가기 위한 노력도 소홀했던 것 같다. 그러나 종종 노회찬이 그림다는 말을 전하는 시민들이 주변에 많기에 내가 속한 지역에서부터 노회찬의 6411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보자는 걸음은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거대한 중앙정치가 장악된 곳보단 한발 물러선 지방에서 다양한 정책과 실천을 통해 정치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이 가능할 것 같아 보인다.

6411 정신은 노회찬 정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개념이자 실천의 역사입니다. 긴 발표문과 어려운 단어들이 보여주듯 ‘6411 정신’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 정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6411 정신’보다는 ‘노회찬 정치’, ‘노회찬 정신’이 보다 대중에게는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개념일 것입니다.

‘6411 정신’은 역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노회찬을 따라 6411 버스에 탑승하거나 또는 ‘6411 정신을 빼고는 다 바꾸어야 한다’라는 표현에서와 같이 진보정당에서 지켜야 할 정신으로 이야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많은 이들에게 와 닿지 않는 이유는 ‘노회찬의 6411’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6411 정신’은 노회찬의 삶, 운동과 정치의 여정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노회찬에게 6411이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일 것입니다. 따라서 ‘노회찬’ 없는 ‘6411 정신’은 아직까지 불완전합니다. 즉, ‘탑승이나 연설’이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궤적이 중요합니다. 6411 정신은 바로 구현되거나 다짐한다고 구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실천의 축적 과정을 거친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노회찬’은 개인 노회찬이 아니라 노회찬 정치를 실현하는 많은 ‘노회찬’들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6411 정신은 지속적인 성찰과 기본에 충실한 진보정치의 필요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정치에도 유행이 있습니다. 진보정치도 이러한 유행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치적 선택들은 때로는 스스로의 정치적 기반을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6411은 진보정치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누구나 공감하고 지지받을 수 있는 진보정치, 그들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누구와 함께하고자 하는지를 명확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 지지를 쌓아가는 ‘탄탄한 기본기’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공존하는 방식이고, 민주주의의 주체는 시민입니다. 서로의 이해에 따라 갈등하지만, 그것은 개인과 공동체의 유지·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와 차이 속에서도 공통적 기반을 찾아내는 것, 6411의 인문성은 그러한 보편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공통(보편)의 기반 속에서 차이를 드러내는 것에서 6411의 정치는 출발하고 있습니다. 가장 급진적인 정책, 새로운 주체, 세대, 아젠다가 아니라 묵은 것, 일상적인 것, 잔잔한 것, ‘평범’한 것을 다시금 드러내 의미화하는 것이 6411의 인문성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세상을 바꿀 정치적 힘(연대와 지지)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가는 6411의 정치입니다.

다른 한편 모두로부터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진보 정치, 지지를 쌓아가는 정치가 6411의 정신입니다. 어쩌면 냉혹한 한국 정치의 현실에서 진보정치에게 필요한 것은 ‘조급성을 버리는 것’일 것입니다. 대중과 진보 정치가 상호 이해하고 노력·신뢰함으로써 세상을 바꾸기 위한 힘을 쌓아가는 것이 진보정치의 발전과정일 것입니다. 매번 남은 역량을 탈탈 털어 제도 정치에서 힘을 키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쩌면 정치적 부채감 소위 ‘지못미’, ‘졌잘싸’, ‘진보정치 다움’의 축적일 것입니다. 노회찬의 6411 정치는 모두가 인정하고 존중받는 진보 정치, 저도 지지 않는 진보정치의 이상 속에 살아 움직일 것입니다.

함께 논의해볼 지점은 ‘시민정치지성’, ‘노동존중’ 등의 개념이 변화의 주체와 방향 등을 잘 담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선 ‘시민정치지성’은 ‘주권’과 ‘변화’의 강조 속에서 그 주체와 방향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노동존중 시민정치지성’과 같이 변화에 대한 열망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변화(진보)의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개념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요?